



보도 일시	2022.11.25.(금) 14:30 이후 사용	배포 일시	2022.11.25.(금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장 이인용 (044-200-2396)
		담당자	사무관 김지현 (044-200-2416)

한덕수 국무총리,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

- 규제개혁 성과 창출 이끌어갈 각 분야 전문가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 -
-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참석, “위원회, 규제혁신 정책 선도할 것” 당부 -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(금),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*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.

- * ▲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설치('98)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·강화 규제 심사, 기존규제 정비, 각종 규제정책 심의·조정 등 기능,
▲ 위원장은 총리·민간 공동으로,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(임기 2년)

<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(9명) > ※ 가나다 순

- ▶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- ▶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
- ▶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- ▶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
- ▶ 오 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
- ▶ 오정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
- ▶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
- ▶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- ▶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

○ 신임 민간위원은 정부, 법조계,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,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 총리는 “새 정부 출범 후 민간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졌으며, 새롭게 위촉된 위원 분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은 정부 규제혁신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”며,
 - 위원회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주문하였다.
- 한편, 이날 한 총리는 위촉식 직후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했다.
 - 이번 위원회 참석은 민간위원 신규 위촉과 위원회 역할 강화방안 발표를 계기로, 위원회가 규제혁신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 - 또한, 지난 11월 9일(수)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이후, 약 2주 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었다.
- 한 총리는 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 정책을 심의·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”며,
 -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·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,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.
 - 특히, 규제혁신추진단, 규제심판제도,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 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·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또한, 한 총리는 “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,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없이 달려왔다”며,
 - “정부 규제혁신의 중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·조정하고, 다양한 추진체계들이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**설치 및 구성**

- (설치)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(98.4.16 발족,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)
- (구성) 위원장 2인(국무총리·민간위원장) 포함, 20~25인으로 구성(법 제25조)
 - 당연직(8) : 국무총리(위원장), 기재부·행안부·산업부·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공정거래위원장, 법제처장
 - 위촉직(17) :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

□ **기 능**(법 제24조)

-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·발전
-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
-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,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
-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 등

□ **민간위원 임면**(법 제25조, 제27조)

- (위원 임기) 2년
- (위촉)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
- (해촉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,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